北 '대화카드'… 한반도 정세 미묘한 기류

韓 "계산된 행보"…美 긍정 평가 "행동 보여라"

관련국들 반응 주목…중·러 양국 지지행보 예상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기류가 생성되고 있다.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싼 군사·외교적 대치국면의 한복판에서 대화를 겨냥한 새로운 흐름이 불쑥 등장한 셈이다.

특히 북한이 꺼내든 '패키지 제안'은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중국·러시아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외교적 동력을 얻어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21일 "북한이 남한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도 불구하고 전에 공언했던 보복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북한 리처드슨 주지사는 5박6일 일정을 마치고 중국국제항공 CA122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전 11시30분)께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에 합의했으며 1만2천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spent fuel rods)을 남한에 판매해 반출하는 것과 관련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영변으로 들여보내 자신들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라며 "사찰단 복귀 절차 등은 앞으로 6자회담국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어 북한이 남북 군사 핫라인 구축, 남북한과 미국 3국이 참여하는 서해 분쟁지역 감시 군사위원회 설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대화카드는 대화국면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겨냥한 고도의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IAEA 사찰단 복귀 카드가 지난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사찰단 복귀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6자회담 재개의 중재역에 나선 중국의 주문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게 비핵화의 '일정한 성의'를 보여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선제적으로 대화카드를 던져 한·미·일을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의 5대 전제조건을 구축하려는 흐름을 무력화하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이번 대화카드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이다. 우선 북한의 이번 대화카드는 중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러시아와의 공감대에 터잡고 있다는 점에서 중·러 양국의 지지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대북압박 공조를 형성해온 한·미·일이 북한의 대화제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느냐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특히 IAEA 사찰단 복귀허용은 오히려 북한의 핵활동을 외부에 선전해줌으로써 핵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속셈이라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핵시설 가동중단이 선행되고 이어 핵사찰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또 북한이 제안한 미사용 연료봉 1만2000개의 해외판매(외국반출)는 이미 핵문제의 초점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으로 넘어간 현시점에서는 '의미없는 낡은 카드'라고 정부 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원칙적 대응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톤을 보이고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번 대화제안을 일단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국면전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북한을 찾은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운데)가 21일 5박6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 둘러싸인 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6월 기본구상·연말 첫 지정…야당반발 '변수'

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4대강 주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이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보전해주려는 특혜냐를 놓고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달 말 공포되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어디가 지정될까** =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4대강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막고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 정비와 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대상 지역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이고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1만2000㎢나 된다.

그러나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구간(1600㎞, 6400㎢)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 뻔하고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40%, 즉 2500㎢ 안팎이 친수구역 지정 후보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보가 설치되거나 경관이 수려하다는 등의 입지 여건을 갖춰야 하고 개발 수요가 있는 대도시 인근이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전제하면 지정되는 친수구역은 4대강별로 2~3곳, 총 10곳 안팎일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해 대상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 주거, 문화, 관광, 레저, 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법 시행 순탄할까** = 국토부는 개발 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 뒤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통해 구역 지정,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법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 법이 7000㎢(서울 면적의 11.6배)에 대한 '공적' 난개발을 부추김으로써 '수질 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친수구역 지정권자가 4대강 사업의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또 하천관리기금 용도에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가 부담해 시행한 국가하천 공사 비용 보전'도 명시해 개발이익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되돌려주겠다는 의도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❶불시 공격 ❷대화 재개 ❸南 반격 예상

美 정보업체 '北이 대응하지 않은 3가지 이유' 분석

북한은 남한이 연평도에서 해안사격훈련을 재개하더라도 3가지 측면에서 대응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던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전문업체인 '스트랫포(www.stratfor.com)'는 사격훈련이 있기 사흘 전인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격훈련과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이라는 보고서를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트랫포는 우선 대응공격을 하지 않는 데 대한 근거로 지난 3월 천안함 사태나 지난달 23일 연평도 도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불시에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이 이미 몇 주 동안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공언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감이 최고점에 달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불만을 표시하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 공격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진행 중인 상황이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스트랫포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평양을, 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와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각각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등 지난 몇 주 동안 6자회담국간에 일련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번에는 반격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도발하지 않는 이유라고 꼽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북한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이며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북한 지휘부에서만 공격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되기 때문에 공격 가능성은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軍 복무 21개월로 동결

병사 복무기간(육군 기준)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계획 수정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3일부터 23개월, 1월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되며 이런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한국교통연구원과 MOU

광주시가 지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연구협력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와 한국교통연구원 간 MOU(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대한 노하우를 비롯해 광주시의 교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술 등을 제공하게 된다.

강운태 시장은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지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김치타운 두달만에 2500명 방문

광주김치타운 방문객이 개관 이후 2개월만에 2500명에 이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광주김치타운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두 달 만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모두 2500여명이 김치타운을 방문했으며, 오는 23일엔 중국 관광객 120명이 김치체험 팸 투어 형식으로 김치타운을 방문할 계획이다.

남구 임암동에 있는 김치타운은 김치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김치 테마파크로, IT기술을 이용한 체험위주의 김치박물관과 김치아카데미, 김치가공공장 등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집적화 단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치타운 부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김치발효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2012년 하반기 준공되면 김치타운 일대가 명실상부한 김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